



1일차 교육자료

2026 교육부 K-EDU 정책 소개 및 국제교류 필요성

목 차

01

교육부 정책 소개

01 교육부 정책 방향

02 교육부 간담회 소개

02

국제교류 필요성

01 왜 국제교류 해야 하는가

02 대학의 위기 극복 방안

03 국제교류 전략 체계도 예시

03

NAFSA 참가

01 국제 컨퍼런스 참가

02 컨퍼런스 참가 적용

교육부 K-EDU 정책

- K-POP, K-FOOD 등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한류에 발맞춰 우리의 우수한 교육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 추진

최근 교육부 고등교육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관련 진행 사항

2026. 04. 09	• 교육부 주관 국제화 정책 간담회	경기대 서울캠퍼스 세미나실
2026. 04. 10	• 2026. 1차 KAFSA/KADIA 임원회의	서울역 근처 식당
2026.04.30~05.15	• 해외 연계 국제프로그램 관련 설문조사	
2026. 06.19	• 해외 프랜차이즈 교육과정 운영 대학 간담회	서울 연세대학교 세미나실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해외 진출 관련 K-EDU 정책은 대학의 해외 교육사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교육부의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대학의 여건에 따라 진행”

교육부 간담회 주요 내용 1

교육부 간담회 목적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유학생 유치 관리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교육부 간담회 주요내용

프랜차이즈 등 해외 진출 관련 쟁점 제도 개선 방향, 각 대학 해외진출 현황 공유 및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질의 건의사항 등

해외진출 프로그램

구 분	교육과정 공동 운영	프랜차이즈	국외분교 설립
개념	해외대학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	해외대학에 국내 교육과정 전수 운영	국내대학 해외 분교 설립
학위 수여	해외 및 국내학위 (1+3, 2+2 과정 등)	국내대학 학위 (4+0 과정 등)	국내대학 학위
법인설립	불필요	현지 대학 법인	국내대학 현지법인
재정운영	현지대학	현지대학	국내대학
교직원 파견	자율	제한적	필요

교육부 간담회 주요 내용 2

○ 외국 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프랜차이즈) 제도

- 대학이 본교 교육과정을 외국대학에 전수하여 현지에서 운영하게 하고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국내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 대학의 해외 진출 발판 및 교육 프로그램 수출 촉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물리적 캠퍼스 설립 없이 해외에서 국내 교육과정

외국 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기준 주요 내용

- 사전승인제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시 교육부 사전 승인 필요
- 전임교원 수업비율 전공 교과목 학점의 1/4 이상은 국내대학의 전임교원이 직접 담당하여 수업 진행
- 학위 수요 교수진 파견 비율 및 학사 관리 요건 충족된 경우 국내대학 학위 수여 허용

구분	개정전	개정후
사전승인	• 교육부 사전승인 필수(5년 유효, 갱신시 재승인 필요)	• 사전 승인 폐지
운영방식	•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기준 에 따른 운영	• 운영기준 폐지, 대학의 학칙으로 운영 방식 등 자율적으로 결정
전임교원 수업비율	• 전공 교과목 학점의 1/4 이상은 국내대학 전임교원이 수업 진행	• 국내 대학 외국 대학간 협약 및 학칙으로 자율 결정
학위수여	• 교과목 학점, 수업일수, 전임교원 수업 비율 등 세부요건 충족 시 여	• 수업 방법, 학점이수 등 학칙으로 결정한 요건 충족 시 수여
근거법령	• 고등 교육법 시행령 제13조 2(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교육부 프랜차이즈 관련 제도 변화

○ 주요 추진 경과

- 1 대학 학사제도 개선 방안 수립으로 프랜차이즈 제도 도입 계획 발표 2016. 12월
- 2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프랜차이즈 운영 법적 근거 마련 2018. 5월
- 3 외국 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3개교 운영 승인 2019. 08월
(승인대학 인하대 - 우즈베키스탄, 부천대-우즈베키스탄 , 동아대-베트남)
- 4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기준 에 따라 6개 대학(원) 외국 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프랜차이즈) 운영 승인 2022년 4월
(승인대학 인하대 - 우즈베키스탄, 부천대-우즈베키스탄 , 동아대-베트남, 세종대 -칭다오 농업대, 호남대-중국 등 6개교)
- 5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에 따라 교육부의 사전 승인없이 대학 간 협약만으로 제도 운영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 2024. 2. 20
- 6 외국 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기준 폐지 2024. 02. 2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13조의 2에 따라 교육과정 내용과 수업 방법은 대학 학칙으로 정함)

교육부 간담회 쟁점 논의 및 검토 사항 토론

○ 쟁점 논의

- 1 법인격 및 지배구조 문제
- 2 재정 및 회계 규제 문제
- 3 교원 파견 및 인사관리 문제

○ 검토 사항

- 1 해외진출 제도 정비
- 2 현지 지원 확보를 통한 전략적 지출
- 3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전담 기구 구성

대학의 위기는 어떻게 오는가?

회색 코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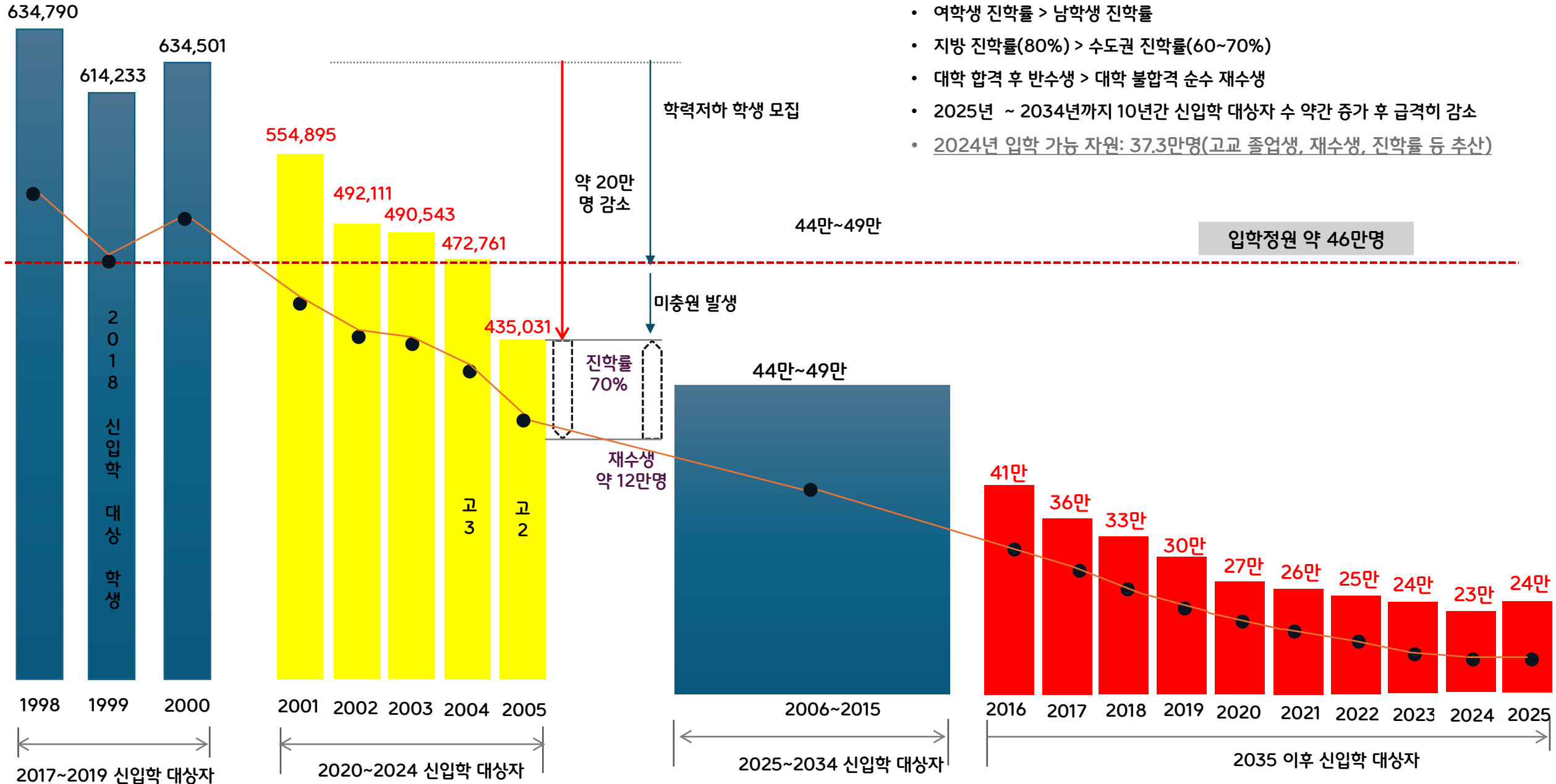
대학위기

블랙 스완



최근 20년 출생아 수

- 최근 5년 평균 대학 진학률 약 70%: 향후 하락 가능성이 높음
- 여학생 진학률 > 남학생 진학률
- 지방 진학률(80%) > 수도권 진학률(60~70%)
- 대학 합격 후 반수생 > 대학 불합격 순수 재수생
- 2025년 ~ 2034년까지 10년간 신입학 대상자 수 약간 증가 후 급격히 감소
- 2024년 입학 가능 자원: 37.3만명(고교 졸업생, 재수생, 진학률 등 추산)





2036년 이후 대학은?

2022 ~ 2035

대학 발전계획 '대학비전 2035' 수립

12Y 후

2036~

대학의 극한 흑한기(죽음의 계곡 진입)

45~49만명



위기 사전 대비 필요성

- 학령인구 감소전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
- AI 시대를 대비한 교육 혁신 필요
- 국가 잠재 성장을 하락으로 인한 재정 압박 가속화 대비 필요

40만명

2016년

35만명

2017년

32만명

2018년

30만명

2019년

27만명

2020년

26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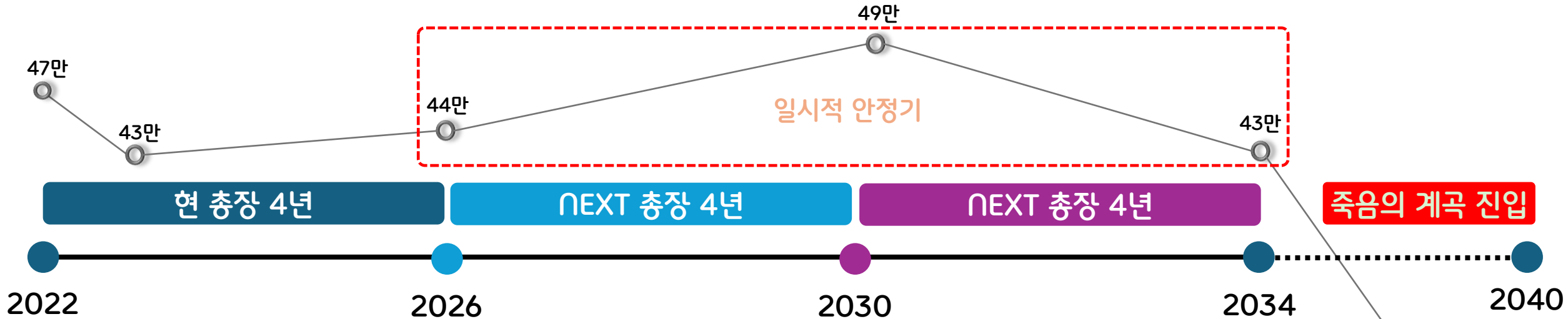
2021년

Univ.
현
구조 유지
가능할까요

Not to be or To be



향후 10년이 대학의 운명 결정



죽음의 계곡 진입 12년 전

- ✓ 학사 & 행정 조직 개편 등 효과가 장시간 걸리는 정책 조속히 시행
- ✓ 위기 요소 분석 및 대책 마련 필요(향후 재정 투입 비용이 큰 현안 준비 필요- 건물 노후화 대책 마련 등)
-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정건전성 투입 방안 마련



죽음의 계곡 진입 8년 전

- ✓ 학사 & 행정 조직 개편 등 성과 분석 및 미진한 부분 재추진
- ✓ 위기 요소 지속 분석 및 관리
- ✓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지속적 점검



죽음의 계곡 진입 4년 전

- ✓ 죽음의 계곡 진입 후 대학 최종 위기 요소 분석 및 해결 방안 집중 관리



왜 대학은 국제교류가 필요한가?

1

대학 재정 기여

외국인 학생 유치를 통한 대학 재정 기여

2

학생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

외국어 능력 향상, 해외 경험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 등 함양

3

학생 자아실현 통로

학생들의 국제화 경험을 통한 만족도 및 자신감 향상

4

AI 시대 부합한 학생 역량 강화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AI 시대에 필요한 창의력 향상



Who moved my cheese?

•
쥐



치즈가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과 철저한 준비

•
사람



치즈가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구체적 준비 계획?

AI 시대, WHY 국제교류가 필요한가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역량" + "삶의 의미, 열정과 자신감" 함양

- AI는 지식을 평준화 하지만, 창의성은 경험에서 함양
 - 다양한 문화와 사고방식 경험을 통한 창의성, 통찰력, 새로운 아이디어 연결 능력 등 함양
- AI는 답을 제시, 좋은 질문은 사람의 몫
 - 국제교류를 통해 다양한 관점 이해, 복합적 문제 분석, 다문화적 맥락 파악 및 비판적 사고 함양
- 글로벌 협업 역량 증대
 - 다문화 협업 경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국제 네트워킹 형성
- 외국 경험 등을 통해 삶의 의미 및 자신감 증대
 - 삶의 목표가 명료해지고 스스로 자아를 찾고 공부하는 힘 형성



AI 시대에 부합하는 학생 성공 대학 구현

국제교류처 비전 체계도예시



학생 성공을 실현하고 미래사회를 창조하는 대학 『OPEN 2036』

대학비전

인재상

ALL BARUN 참인재

국제화 비전

대학발전 & 학생 성공 실현을 위한 GLOBAL 창(WIN-DOW)을 열어가는 대학

3대 전략

올바른 유학생
관리

중도탈락 0%
유학생 상담 100%

글로벌
WIN-DOW
구현

학위과정 0,000명
In & Outbound 000명
해외인턴십 00명

글로벌 네트워
킹 강화

자매대학 000개
교류대학 000개

5대 실행
전략

WIth you

함께 공감하는 올바른
유학생 지원(교과 & 비교과)

network

국제프로그램 홍보 및
자매기관 네트워킹 강화

Database

업무 로드맵 작성 및 국제업
무 데이터 체계적 관리

Ongoing Income

지속가능한 유학생
적극 유치를 통한 재정기여

Whoever

누구나 자유롭게 글로벌
윈도우 경험

국제교류처 발전계획 세부 실행 과제 예시

1	WI th you	함께 공감하는 올바른 유학생 지원 (교과 & 비교과)
2	n etwork	국제프로그램 홍보 및 자매기관 네트워킹 강화
3	D atabase	업무 로드맵 작성 및 국 제업무 데이터 체계적 관리
4	O ngoing Income	지속가능한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기여
5	W hoever	누구나 자유롭게 글로벌 윈도우 경험

- ① 유학생 사전 중도탈락 예방 시스템 구축(중도탈락율 0% 이하)
- ② 외국인 유학생 교육 수요 만족도 조사 및 환류 체계 구축
- ③ 외국인 유학생 일반 및 전문상담 강화 (유학생 상담 100% 이상)
- ④ 해외자매대학 및 기관 대상 네트워킹 및 온라인 홍보 강화
- ⑤ 외국인 유학생 자치기구 확대 (글로벌 K 및 외국인 유학생 K서포터즈 활성화 등)
- ⑥ 외국인 유학생 데이터 관리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 강화
- ⑦ 출입국 외국인 유학생 관리 전산시스템(핀스) 체계적 관리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
- ⑧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학부생 0,000명)
- ⑨ 유학생 전용 글로벌 자유전공학부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학생 유치
- ⑩ 자매대학과의 국제 프로그램(2+2, 중외협작 등)을 활용한 외국인 유치
- ⑪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국제프로그램 강화 (Inbound 000명, Outbound 000명)
- ⑫ 교내 학생의 국제 프로그램 이용률 확대를 위한 대학생활 전주기적 국제화 체계도 구축

국제교류 컨퍼런스 참가

WHY GO

국제프로그램 중 미흡한
부분 점검

시대 변화에 따른 국제교류
트렌드 파악

기존 자매대학과의 신뢰
관계 구축

WHAT DO

교환학생, 인턴십, 단기프로그램
등 국가별로 부족한 지역 담당자
미팅

컨퍼런스 세미나 주제별 참여를
통한 국제학생들의 동향, 대학 선
택시 고려사항, 미래 국제교류 전
망, AI 교육 필요성 등

현재 교류가 진행중인 관계 미팅
을 통한 현재 문제점 및

HOW APPLY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해외대학
파견 기회 확대

국제교류 전략 수립 시 참고

기존 교류대학 관련 ONE-STOP
문제 해결 도출 가능

업무내용

- NAFSA-EXPLORE SUMMIT 참석
 - 해외대학 관계자들과 네트워킹
 - 향후 대학의 변화 방향 (문화적 변화- 인식 등, 구조적 변화, 성공과 역량 평가 기준 등)
 - 現 국제교류 및 외국인 유학생 동향 (대학 선택 시 선호 사항 등)
 - 대학 변화와 변혁을 위한 노력
 - AI 시대 대학의 역할 및 준비

시사점

○ NAFSA-EXPLORE SUMMIT 핵심 내용 정리 및 시사점

④ 2030년 AI 교육 준비 질문

- 대학의 AI 교육은 단순히 컴퓨터공학과 진학자를 늘리거나 교과목 몇 개를 추가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됨
- 전공 교육 전반의 근본적 재설계 (AX: AI Transformation)
 - AI 융합 브릿지 과정 및 기초 소양 의무화: 인문, 사회, 예술, 자연과학 등 비전공자도 자신 학문 분야에 AI를 도구로 쓸 수 있도록 전교생 'AI 리터러시' 및 'AX 융합 교양' 교육 필요
 - 전공별 AI 활용 역량 강화: 각 전공의 핵심 커리큘럼에 AI 방법론을 내재화하는 재설계가 필요
- 교수진(Faculty)의 AI 교수법 역량 강화
 - 교수자 재교육(Upskilling) 의무화: 생성형 AI를 활용한 수업 설계, AI 기반 평가 방식(단순 과제 제출이 아닌 구술 인터뷰나 실습 중심 평가 등)에 대한 교수 지원 프로그램(CTL)을 대폭 확대
 - AI 교수 지원 시스템 도입: 교수의 행정 업무나 강의 콘텐츠 리서치를 돕는 'AI 조교'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수가 학생 멘토링과 심화 교육 등 고부가가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개인 맞춤형 대학 교육 체계 구축 (Hyper-Personalization)
 - AI 기반 맞춤형 학습 경로 제공: 학생 개개인의 학습 스타일, 속도, 강점과 약점 AI로 실시간 분석 보충 자료 주거나 심화 과정 추천하는 어댑티브 러닝(Adaptive Learning) 도입 필요
- AI 윤리 및 책임 있는 활용(Digital Literacy) 교육
 - AI 윤리 및 리터러시 정규화: AI 모델의 편향성, 저작권 문제, 가짜 뉴스 가려내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등 AI를 '제대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소비, 생산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 역량 포함
 - 평가 방식의 대전환: 챗GPT 등으로 1분 만에 써낼 수 있는 단순 리포트식 과제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 과정 중심의 프로젝트형 평가(PBL)나 구술시험 등으로 평가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지자체·산업계·대학간 '공유 협력 생태계' 조성
 - 공통 교육 자원 공유: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양질의 AI 강좌와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을 인근 대학, 전문대 등과 공유하는 플랫폼을 활성화
 - 산업 현장 연계 프로젝트: AI 산업 변화 속도가 대학 커리큘럼보다 빠르기 때문에, 기업과 연계해 실제 데이터를 다뤄보는 '산학 연계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를 교육 체계 핵심 편입 필요

대학 적용 방안

- 외국인 유학생 동향 분석 자료에 근거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선택시 고려사항이 개인 선호, 취업, 영어권, 학비 등 고려함에 따라 우리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수립 시 반영 필요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떤 변화와 변혁을 할 것인지 현재 교육시장을 분석을 통한 대안 마련이 필요
- AI가 급속도로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교육을 통한 AI 활용 인재 양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대학은 융합형 인재를 키워내는 플랫폼이 구축하고, 대학 총장은 직속의 AX(AI 전환)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거버넌스, 학제, 인프라를 동시에 개편하는 과감한 실행 방안 마련 필요

A decorative graphic on the left side of the slide, featuring a dark blue background with a network of white dots and lines. Several circular icons are scattered throughout, including a book, a clock, a graduation cap, a microscope, and a globe. The text "감사합니다." is written in a large, white, sans-serif font, centered horizontally and partially overlapping the decorative graphic.

감사합니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최근 유학생 비자 정책

2026.6.24.(수)



법무부

목차

1 정책 환경

2 정책 추진방향

3 유학비자 개요

4 광역형 유학비자 정책

5 유학생 취업 지원

6 유학생 정착 지원

1. 정책 환경

생산연령인구 급감

3,667만명

3,486만명

3,381만명

2,852만명

저출산 고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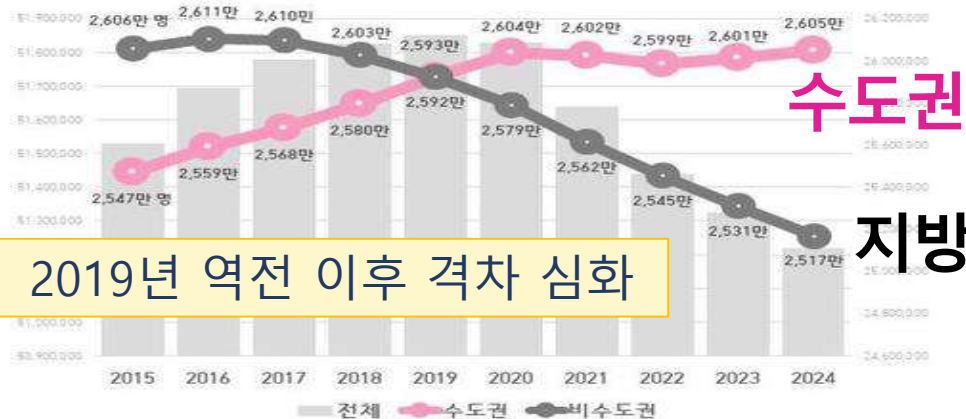
2022년

2027년

2030년

2040년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 위기



기존 정책의 한계



정년 연장



AI 자동화



출산율 제고

인력 부족,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문제 해결 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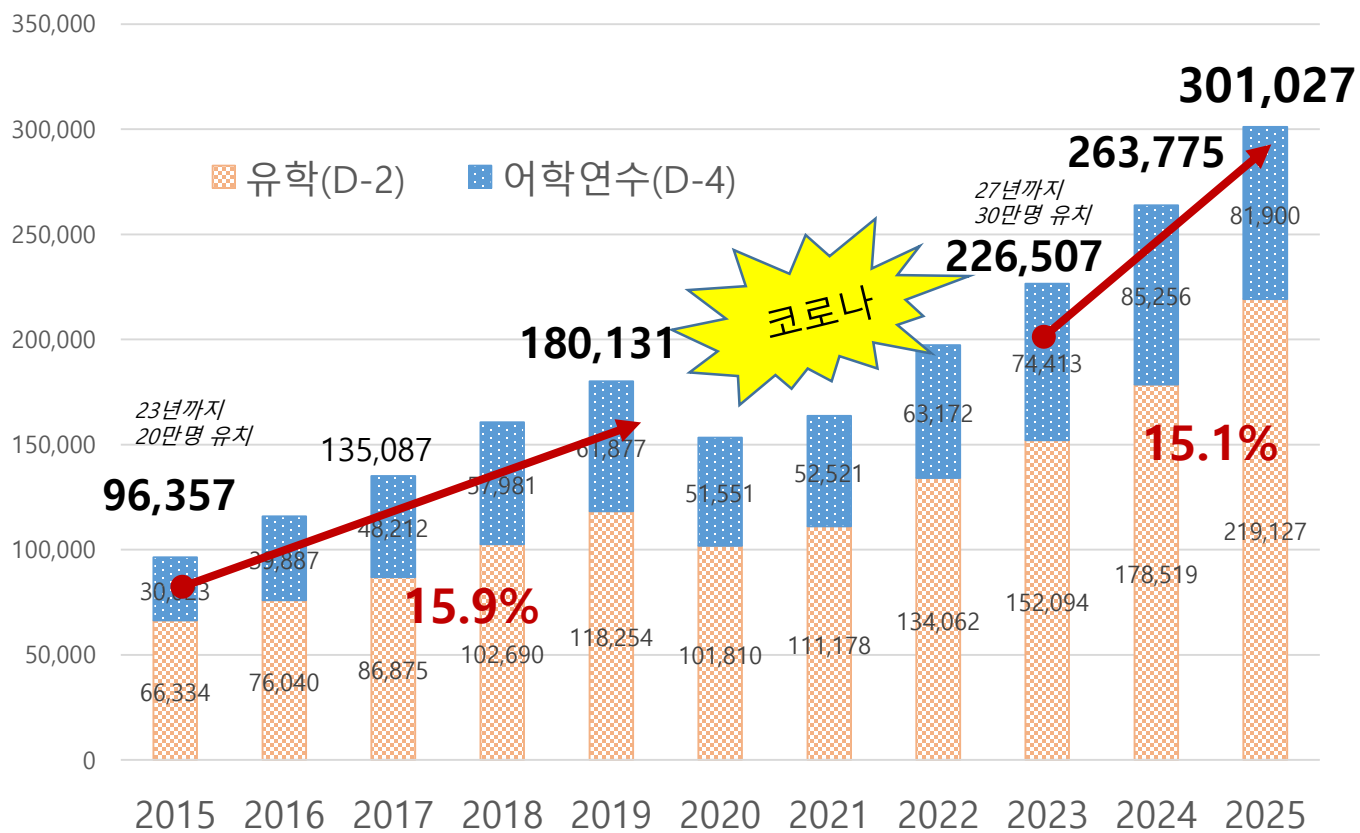
이민정책 적 관점의 유학비자정책 필요

우수한 유학생 졸업 후 지역 취업 등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교육 필요



1. 정책 환경

외국인 유학생 연도별 현황



'26년 3월말 체류외국인 2,833,333명 중 유학생은 326,385명(11.5%)

외국인 유학생 국적별 현황

	총계	유학(D-2)	어학연수(D-4,1,7)	비율(%)
전 체	326,385	243,656	82,729	100
베트남	122,734	65,819	56,915	37.6
중 국	76,578	72,005	4,573	23.5
몽 골	19,284	14,730	4,554	5.9
우즈베키스탄	22,481	20,850	1,631	6.9
네 팔	20,324	19,581	743	6.2
미얀마	11,424	7,216	4,208	3.5
일 본	4,334	3,354	980	1.3
방글라데시	6,616	5,606	1,010	2.0
기타 국가	42,610	34,495	8,115	13.1

26년 3월 법무부 통계월보

'24년말 베트남,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네팔, 미얀마 순

'26년3월말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네팔, 몽골, 미얀마 순

1. 정책 환경

최근 10년간 외국인 유학생 국적별 현황

	총계	유학 (D-2)	어학연수 (D-4-1,7)	비율(%)
전 체	106,138	76,163	29,975	100
중국	63,253	46,355	16,898	59.6
베트남	9,278	4,128	5,150	8.7
몽 골	5,363	2,692	2,671	5.1
일본	2,654	1,951	703	2.5
우즈베키스탄	1,658	1,122	536	1.6
인도네시아	1,440	1,266	174	1.4
파키스탄	1,236	1,137	99	1.2
미 국	1,428	1,259	169	1.3
기타 국가	19,828	16,253	3,575	18.7

'16년 3월 법무부 통계월보

'16년 3월말 중국, 베트남, 몽골, 일본,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미국, 파키스탄 순

중국이 거의 60%를 차지(대학원), 2% 이상 국가는 몽골, 일본으로 특정국가에 편중

20년 3월말 이후
베트남 유학생
(D-4) 급증으로
역전

	총계	유학 (D-2)	어학연수 (D-4-1,7)	비율(%)
전 체	326,385	243,656	82,729	100
베트남	122,734	65,819	56,915	37.6
중 국	76,578	72,005	4,573	23.5
우즈베키스탄	22,481	20,850	1,631	6.9
네 팔	20,324	19,581	743	6.2
몽 골	19,284	14,730	4,554	5.9
미얀마	11,424	7,216	4,208	3.5
방글라데시	6,616	5,606	1,010	2.0
일 본	4,334	3,354	980	1.3
기타 국가	42,610	34,495	8,115	13.1

'26년 3월 법무부 통계월보

'26년3월말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일본 순

베트남과 중국이 61%를 차지, 우즈베키스탄,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2% 이상 국가 증가로 다변화

1. 정책 환경

"美 유학생 비자 이유 없이 취소"...캠퍼스 혼란·불안 확산

아시아투데이 원문 | 기사전송 2025-04-09 10:44

AS생으로 요약

1

이민 급증에 따른 주택난에...호주, 외국인 유학생 비자 규정 강화

입력 2024-03-21 15:47

영어 요구 수준 상향 및 '취업 목적' 유학생 단속 강화
방문 비자에 '추가 체류 금지' 조건 더할 방침



미국 하버드



▲호주 시드니에서 젊은이들이 도시 전경을 감상하고

아시아투데이
사유 없이 취소
부 학생들은 이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 취소된 사실
고 측은 유학생
국에 유학생이

이민자 급증으로 주택난에 시달리고 있는 호주가 외국인 유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클레어 오닐 호주 내

기 위한 이민 정책을 실행하는 동시에 이민자 수를 계속해서

호주는 23일부터 유학생 비자 발급 시 요구하는 영어 구사

으로 위반할 경우 해당 업체의 유학생 모집을 강제로 중단할

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방문 비자에 '추가 체류 금지

앞서 호주는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사태로 인력

호주 통계청(ABS)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순이민자

캐나다 정부, 유학생 35% 감소 정책 발표[통신One]

(영크론=뉴스1) 김남희 통신원 | 2024-01-2



지난해 3월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부 정

생 비자 수를 제한할 것이라

6만 개의 학생비자 허가를

로 2년 동안 유지될 것이라

밀러 장관은 "캐나다에서

나다 내 유학생 수가 더 이상

지원 입학 한도를 설정할 것

이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있고, 일부 주에서는 더 많은

이는 유학생 수용 한도는 전

"네덜란드어로 수업해... 유학생 많이 받지마"

당국, 집값 급등에 비상 대책

유재인 기자

입력 2023.06.22. 03:00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중앙역./로이터뉴스1

이르면 내년 가을 학기부터 네덜란드 대학에서 전공 수업의 최소 3분의 2는 영어가 아닌 네덜란드어로 진행될 전망이다. 네덜란드는 생활 환경이 좋고 학비가 낮아 전체 대학생의 15%가 외국인 유학생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이 몰리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육 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20일(현지 시각)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교육부는 이르면 2024년 9월부터 대학 학위 과정 수업의 3분의 2 이상을 네덜란드어로 진행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네덜란드 대학 학사과정에서 영어로 수업하는 비율은 학과별로 차이가 있지만 높은 편이다. 예컨대 공학 계열은 수업의 62%가 영어로 진행되고, 경제학도 53%에 달한다. 로버트 데이크흐라프 교육장관은 "교육 언어의 출발점은 네덜란드어여야 한다"며 "일부 전문 과목을 (3분의 1 넘게) 영어로 제공할려는 경우 특별 허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 ✓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확보?
절반이 한국어능력 못 갖춰...
고등교육 신뢰 하락 우려
- 2023년 국감 중

- ✓ 대학과 지자체가 유학생 숫자 확대
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불법체류자
양산 등 부작용 우려
- 2024. 3. 한국일보

- ✓ 등록금 출납기 된 마구잡이 외국인
유치... 유학 10대 강국?
- 2024. 5. 브레이크뉴스

- ✓ 외국인 유학생 87%, 한국 취업 희망
... 취업경로 확대 검토해야...
- 2025. 3. 연합뉴스

1. 정책 환경

우익당 압박 속...영국 “2029년까지 이민 매년 10만명 줄인다”

(‘25.5.13. KBS뉴스)

영국에서 반 이민 기치를 내건 우익 성향 영국개혁당이 위세를 넓혀가는 가운데 노동당 정부가 2029년까지 해마다 이민 10만 명씩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현지시각 12일 **돌봄 노동자 비자를 폐지** 하고 **숙련 노동자 비자 요건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민 제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구체적인 이민 감소 목표는 설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내무부는 이번 핵심 정책으로 2029년까지 연 10만명이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주요 언론은 전했습니다.

새로 발표된 정책에 따르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거주 기간이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보수당의 보리스 존슨 정부 때 도입된 **돌봄 부문 비자의 신규 발급이 중단**됩니다.

숙련 노동자 비자 자격 요건이 석사 이상으로 강화되고, 숙련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32% 인상됩니다. 현재는 채용 첫 해 대기업의 수수료는 천파운드, 우리 돈 약 1,87만원입니다.

영국 대학에서 유학한 국제 학생은 졸업 후 2년간 영국에서 일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를 18개월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학의 유학생 등록금 수입에 대해 새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의 영어 능력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정부의 새 이민 정책이 "마침내 우리 국경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것"이라며 "취업·가족·유학을 포함한 이주 시스템의 모든 측면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6년 05월 07일 목요일 025면 오퍼니언

외국인 근로자 '언어 리스크'가 산업 경쟁력 혼돈다



전원군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
근로자취업교육강사

외국인 근로자 110만명 시대, 말이 통하지 않는 현장을 방지하는 것은 사 고와 비용을 동시에 키우는 일이다. 제 조업과 건설업, 농업 등 주요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인력은 이미 대체 불가능 핵심 노동력으로 자리 잡았고, 일부 업종에서는 이들 없이 정상적인 생산 자체가 어려운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력은 더 이상 보조 인력이 아니라 산업 유지의 전제 조건 이 되었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력의존

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생산성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관리 체계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본적인 의사소통 문제로 인한 비효율과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 폭력 사건 역시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사례로 볼 수 있다. 개별 사 건으로 치부하기보다 제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문제는 언어다. 작업 지 시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거나 안전 수칙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생산성 저하로 직결된다. 동일한 작업에서도 제 작업과 지연이 반복되며 효율이 떨어지고, 이는 곧 기업의 비 용 증가로 이어진다.

더 큰 문제는 안전이다. 위험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경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산업재해 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안전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은 확보되기 어렵다. 결국 언어는 생산성과 안전을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변수이며, 관리 대상 이 아니라 투자 대상이다.

현재의 교육 체계는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 고 있다. 입국 직후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교육은 건강검진과 행정 절차가 병행되는 일정 속에서 진행되며,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비행 지연 등 변수까지 고려하면 교육의 질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어와 직장 문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현장 에 투입되는 구조는 사고 위험을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이 는 병행 비용 문제다. 산업재해로 인한 직접 손실뿐 아니라 생산 차질, 관리 비용 증가, 평판 리스크까지 이어질 수 있다. 언어 교재 비용과 교육 비용까지 고려하면 언어

문제는 단기 비용이 아니라 장기 비용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외 국인 근로자의 언어와 문화의 역량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비용 절감과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로 접근해야 한다. 불법채류자 문제 역시 단속 중심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 다. 송출국과의 협력 강화, 인력 배정 구조 조정, 사전 교육강 화 등 예방 중심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안정적인 인력 관리 없이는 산업 전반의 효율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외국인 인력 정책은 단기 대응이 아니라 중장기 전략으로 다뤄져야 한다. 과거 한국이 해외 노동을 통해 성장 기반을 다졌던 점을 고 려하면, 현재의 외국인 노동 정책은 단순한 인력 관리 차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이미지에 직결되는 문제다.

특히 한국의 작업 방식과 안전 관행에 대한 이해 부족은 단 순한 적응 문제가 아니라 사고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다.

외국인 인력 110만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인력 확대가 아니다. 생산성과 안전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질적 관리 다. 그 출발점은 분명하다. '언어와 문화'다. 말이 통하지 않 고 현장의 작업 문화가 공유되지 않는 환경에서 효율과 안전 을 기대하는 것은 착각이다. 외국인 노동 정책은 이제 언어 와 문화라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

경기도 수원시에 본사를 둔 농업 기 업 누보는 직원 169명 중 19명이 외국 국적이다. 울산공장에서 일하는 생산 직을 제외하고도 본사에서만 5명이 사 무직으로 근무 중이다. 카자흐스탄국 립대와 서울대에서 공부한 카자흐스 탄 출신 사비나 아흐메토프 씨(가명 ·29)는 동유럽 시장 개척을 맡고 있 다. 아흐메토프 씨는 카자흐스탄 가정 용 원에 시장을 공략하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회사가 이를 계기로 동유럽 국 가 수출의 활로를 찾았다.

농업 기업 대동은 최근 카자흐스탄 직원을 채용했다. 현재 대동 서울사무 소에서 근무하는 오테겐 가우하르 씨 (27)는 중동 지역 마케팅 등을 도맡아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국립대 한국학 과를 졸업하고 2021년 한국에 온 그는 한양대에서 마케팅 석사 학위를 받 으 며 한국 취업에 나섰다.

최근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핵심 보직에 외국인을 채용하는 사례 가 늘고 있다. 기존 생산직 등 블루칼 라를 넘어 사무직인 화이트칼라 직종 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들은 아예 한 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 한 후 기업에서 주요 업무를 맡아 성과 를 내고 있다. 국내 한 중소기업 관계 자는 "해외 진출 시 파트너사를 두지만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지 규정 까지 잘 알고 있는 외국인 직원들의 역



한국서 학사·석박사 마치고
취업 후 신시장 개척 등 성과

2024년 국내 외국인 총연봉
24조원 육박 사상 최대 기록

한국선 '쉬었음 청년' 늘면서
일자리 둘러싼 갈등 우려도

할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화이 트칼라 근무자들이 활약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받아간 총 연봉도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국세 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근로 자의 총 연봉은 23조6387억원으로 2020년(16조426억원) 대비 47% 늘 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5년 이 래 최대치로, 업계에서는 이 같은 추세 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수도 2020년 54만 4883명에서 2024년 66만809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4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 국적은 중국이 19만5539명으

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6만2144명, 인 도네시아 4만439명, 필리핀 3만914 명, 미국 2만4152명 순이다.

구직 비자를 받은 외국인도 늘고 있 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3월 등록 외국인 수는 122만1685명이었는데, 이들 중 비전문·단순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E-9 비자를 받은 인원은 26만 3256명이었고, 구직 비자인 D-10은 1 만3805명을 기록했다. D-10 비자는 국내에서 학업을 마친 후 구직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이 받을 수 있다. 이 수 치는 올해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등록 외국인 수는 216만 6955명인데 E-9 비자는 34만635명, D-10 비자는 2만6101명으로 뛰었다.

하이트칼라 외국인 근로자 증가는 한국 경제구조의 새로운 흐름으로 분석된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는 "저출생 등으로 인해 국내 인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비전문 인력뿐 아니라 고도화된 영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인력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우수 외국인 인 력 유입 지원을 더 확대하고, 이들을 위한 전문인력 비자 발급, 안정적 정착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서울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에서 업무 경 험을 쌓고자 하는 외국인도 늘고 있 다. 일본인 오카와 미사토 씨(34)는 한 국에서 한국어교육 석사를 마친 후 디 자인 콘텐츠 기업 마리디에서 근무하 고 있다. 그는 "한국 기업의 뛰어난 서 비스를 일본에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이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쉬었음 청 년'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향후 외 국인 근로자와 일자리 갈등이 첨예해 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국가데이 터처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쉬었 음 인구는 42만5000명, 20대 쉬었음 인구는 40만5000명으로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동열 건국대 경 영학과 교수는 "'쉬었음 청년'의 핵심 원인은 원하는 경력형 일자리 부족, 반복된 탈락 경험, 장기 커리어 불안 등 구조적 문제"라며 "외국 인력 의 증가가 청년층 일자리 기회를 일부 축소시키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이유진 기자

1. 정책 환경

한국경제

2026년 01월 28일 수요일 A25면 사회

외국인 유학생 절반, 어학능력 미달 ... “소통 안돼 팀플 망쳐”

✓ 대학 “일단 충원만 하고 보자” ... 유학생 선발·관리 부실

국내 4년제대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절반가량이 교육부가 권고하는 언어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대학이 선발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학생 사이에서는 유학생 선발·관리 부실이 수업 질 저하와 내국인 학생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유학생 49.9%만 언어능력 기준 충족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대 207곳(사이버대 제외)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9만 4025명 가운데 교육부가 제시한 언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학생은 4만 6913명(49.9%)에 그쳤다. 외국인 유학생 2명 중 1명은 수업을 따라갈 정도의 언어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을 통해 대학이 입학허가 심사 과정에서 유학생의 수학능력을 점검할 때 참고할 권장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권고 기준은 4년제 학위과정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어도 영어도 ‘소통 불가’
내국인 학생들은 불편 가중

2040년엔 신입생 충원율 59%
학령인구 감소에 지방대 위기
“유학생 골라 받을 처지 아냐”

느슨한 입학 기준 악용 늘어
불법체류 유학생 10년새 5배↑

(TOPIK) 3급 이상 또는 영어 TOEFL iBT 59점 이상이다. 대학이 기준 미달자를 선발하더라도 별도 불이익은 없다. 입학 선발 권한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취지에서다.

어학 능력이 부족한 유학생이 입학하면서 이들과 수업을 함께 들어야 하는 내국인 학생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재학생 김모씨(23)는 “지난 학기 팀 프로젝트에서 중국인 유학생과 같은 조가 됐는데 소통이 잘되지 않아 어려움이 컸다”고 말했다. 베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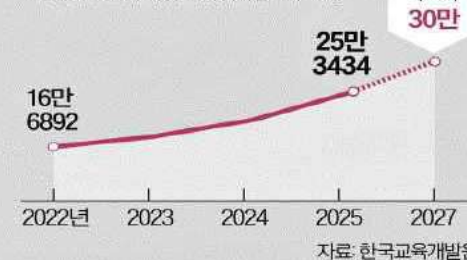


남 유학생과 같은 수업을 들었다는 박모씨(22)도 “유학생이 자료 조사 등 팀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성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다음 학기에는 유학생이 없는 수업을 골라 수강할 예정”이라고 했다.

◆학령인구 절벽에 ‘유학생 유치’ 과열
대학들이 선발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하면서까지 유학생을 무리하게 유치하는 배경에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충원 압박’이 자리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 대학 신입생은 28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모집 정원(47만 4000명)이 유지되면 전국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58.8%에 그친다.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지방 대학일

늘어난 외국인 유학생 (단위: 명)
※전문대·4년제·학위·비학위과정 모두 포함



외국인 유학생 언어능력 미충족률
(단위: %) ※4년제 학위과정 기준



수록 유학생 선발 기준을 하향해 적용하면서 언어능력 기준 미충족 비율은 높아졌다. 지난해 비서울권 대학의 언어능력 기준 충족률은 41.5%로 전국 평균보다 8.4%포인트 낮았다. 학생 충원이 비교적 수월한 서울 주요 10개 대학(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유학생의 언어능력 기준 충족률은 67.7%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유학생 선발 단계에서 언어 능력을 비롯한 학업 수행 의지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면 유학 비자를 악용한 불법체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학생 비자가 비교적 수월하게 발급된다는 점을 노려 입국한 뒤 학업 대

신 취업에 나서는 사례가 적지 않다. 법무부에 따르면 유학생 비자로 들어와 불법체류한 비율은 2014년 7.8%에서 2024년 11.6%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외국인 유학생 출신 불법체류자는 6782명에서 3만 4267명으로 다섯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한 지방 사립대 관계자는 “지방 사립대는 등록금을 내고 입학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상황”이라며 “유학생 선발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해가며 골라 받을 여건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대 중에는 교육부가 권고하는 어학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절반까지 지급하며 외국인을 유치하는 곳이 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1. 정책 환경

민족경제

2025년 03월 24일 월요일 A08면 종합

“박사 따도 月 200만원” … 韓에 등돌리는 이공계 유학생

✓ 임금·연구기회 ‘차별 대우’ … 비자 전환율도 0.38% 불과

연구개발(R&D) 등 첨단 분야를 전공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행이 급격히 둔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한국을 떠나는 이공계 유학생도 늘고 있다. K컬처 붐의 영향으로 사회 계열, 예체능 분야 유학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R&D 인재 확보가 시급한 만큼 이공계 유학생이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20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최근 펴낸 ‘첨단 분야 인재 확보를 위한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 활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외국인 공학 계열 박사 과정 입학생은 911명으로 2016년 775명에 견줘 1.2배(136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사회 계열(경영·법학·정치·사회) 입학생이 439명에서 1557명으로 3.5배, 예체능(연극·영화·음악·미술) 전공은 212명에서 1627명으로 7.7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이공계 유학생 유입은 사실상 정체돼 있는 셈이다.

학위 과정을 중도 포기하는 유학생도 늘고 있다. 2016년 138명이던 공학 계열 박사 과정 제적생은 2023년 208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해 박사 과정 제적생 중 공학 전공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6.6%로 모든 전공 가운데 가장 높았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행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경직된 비자 제도가

꼽힌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이공계 외국인 대학원생 1000명에게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노동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제도’(복수응답)를 묻자 ‘외국인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유연화’(75.0%)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

외국인 유학생(D-2 비자)은 졸업 후 전문인력 비자인 E-7이나 거주 비자인

첨단분야 인재 육성 ‘경고등’
예체능 박사과정 7.7배 늘때
AI 등 공학계열선 1.2배 그쳐
학위 중도 포기자는 가장 많아

공들여 키워도 도로 뺏길 판
외국인 참여 제한에 연구 못하고
취업 비자 못받아 결국 ‘본국행’

F-2로 전환해야 안정적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다. 하지만 2023년 D-2 유학생 15만2094명 가운데 E-7 전환에 성공한 사람은 576명으로 전환율이 0.38%에 그쳐 ‘바늘구멍’에 가까웠다. 전환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첨단산업 분야 유학생이 상급 비자를 취득하려면 E-7은 한국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F-2는 100% 등의 소득 기준을 맞춰야 한다. 한국 GNI가 가파르게 오른 데다 최근 환율까지



공학 계열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행이 급격히 둔화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연세대 캠퍼스에서 한 외국인 유학생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최혁 기자



폭등해 기준 맞추기가 더 까다로워졌다. 법무부가 공시하는 GNI는 3월 기준 4405만1000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은 박사 학위를 따도 대학에서 연구를 이어가거나 공공 분야에 계약직으로 취업해 GNI 소득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사 학위 취득자의 취업 후 연간 근로소득을 분석한 결과 이공계 전공 외국인의 30.2%는 연간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5000만원이

넘는다는 사람은 11.9%에 불과했다. 한국인은 44.0%가 5000만원 이상 번다고 답한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연구 환경 개선’도 과제다. 일본 국적의 한 연구자는 “한국 연구재단이 발주하는 과제는 국적 제한이 있어 외국인이 연구 책임자로 참여할 기회가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첨단 분야 연구 및 진로 정보 채널 부재’ ‘승진 기회 부족’ 등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이렇다 보니 기껏 키워 놓은 외국인

우수 인재가 기회만 되면 해외로 나가는 모습이 포착된다. 한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는 “외국인은 국제기구나 본국 교수로 금방 이직해 근무 기간이 짧은 편”이라고 했다. 연구진이 이공계 외국인 대학원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2%는 현재 연구(전공) 분야가 인공지능(AI), 첨단 부품, 바이오헬스 등 ‘5대 첨단 분야’라고 했다. 국내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할 ‘고급 인재’라는 의미다. 광희 기자

“수업은 하루, 나머지 알바하세요” 대학들 유학생 쟁탈전

생존 위해 수단·방법 안 가려

지난달 15일 경기 북부에 있는 A전문대 매점. 벽면 한쪽에 ‘CCTV 촬영 중. 절도 적발 시, 민·형사상 처벌’이란 경고문이 한국어 외에 영어, 몽골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로도 붙어 있었다. 이 대학의 외국인 학생 수는 전교생의 41%인 5092명(작년 기준). 주요 사립대인 연세대(4740명), 고려대(4471명)보다도 많다. 이렇게 외국인 유학생들이 몰린 큰 이유는 일주일에 학교를 1~2일만 나올 수 있도록 대면 수업을 특정 요일에 몰아주기 때문이다. 한국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 출신이거나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수업이 없는 다른 요일에는 아르바이트에 집중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대학은 대학가에서 “유학생을 뺏어 가는 ‘납치’ 학교”로 악명이 높다. 네팔 출신 한 유학생(22)은 “원래 충북에 있는 대학을 다니다가 지인 소개로 일하기 수월한 이 학교로 옮겼다”고 했다. A대

학생 유치하려 편의 봐주며 운영 매년 외국인 유학생 늘고 있지만 불법 체류자 된 학생 10년 새 5배

관계자는 “맞춤형 수업이 입소문나면서 외국인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온 것”이라고 했다.

5일 본지가 ‘대학알리미’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A대처럼 지난해 외국인 비율이 전체의 40%가 넘는 대학은 전국에 총 8곳이었다. 이 중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대학도 5곳이나 됐다. 갈수록 줄어드는 국내 학생 수 영향으로 신입생 모집난과 경영난을 겪는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로 버티는 것이다. 올해 국내 6~21세 학령인구(678만여 명)는 10년 전보다 22% 줄어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도 잘 나오지 않자, 다른 대학의 외국인 학생까지 빼앗는 쟁탈전이 벌어진 것이다. 부산의 한 대학 관계자는 “우리 대학 학생으로 비자를 받고 입학했다가 다른 대학으로 옮긴 외국인 학생이 3년 전부터 매년 10명 정도 된다”고 했다. 충남의 한 전문대 총장은 “‘편법 수업’ 학교들 때문에 우리처럼 정직하게 주 4일 수업하는 대학만 손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경기 용인의 B대학은 내국인 학생이 410여 명인 반면, 외국인 유학생은 1940명(작년 기준)에 달했다. 이 대학은 “몇 년 전까지 폐교를 걱정해야 할 만큼 재정



지난달 29일 경기도에 있는 A전문대 기숙사 출입문에 한국어뿐 아니라 몽골어와 우즈베크어, 베트남어, 영어로 ‘기숙사 내 이성 출입 및 숙박 행위 금지’ 안내문이 붙은 모습. 지난해 이 대학에 등록된 외국인 학생은 전교생의 41%다.

이 어려웠는데, 총장이 직접 해외로 나가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해 재정 위기에 벗어났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 대학은 재작년과 올 3월 “학생들이 출입국 사무소의 불법 아르바이트 단속에 걸려 벌금 처분을 받았다”면서 “단속에 걸리면 추방당할 수 있다”는 경고 안내문을 올리기도 했다. 한국어 능력 등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고 배달 대행과 같은 특정 업종에선 일할 수 없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광

주광역시에 있는 C대학은 중국인 유학생 110여 명이 가짜 미국 대학 졸업장을 이용해 편입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올 초 법무부 조사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대학 측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만 급급해 학생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을 유치하고, 이들을 해당 지역에 정착시키겠다’는 내용을 목표로 한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를

2023년부터 추진해왔다. 이에 외국인 유학생은 2023년 22만6507명에서 올 3월 32만6385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졸업 후 국내에서 제대로 취업한 이들은 13.8%에 불과하고, 유학생 출신 불법 체류자만 10년 새 5배 넘게 늘었다(2024년 기준).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지역에 필요한 인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오주비 기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



법무부 '유학생 32만명' 비자 정책 개선한다

민·관 합동 '협의회' 발족 '입국 전' 엄격 비자검증 '입국 후' 자유로운 활동

정부가 유학생 32만명 시대를 맞아 유학생 비자 정책 개편 작업에 나섰다. 입국하기 전에는 엄격한 비자 검증을 통해 유학생을 선별하는 대신, 입국 후에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등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법무부는 20일 학계와 전문가들과

함께 유학생 비자정책 체계 전환을 위한 민·관 합동 '외국인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유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해 32만명을 넘어섰다.

협의회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비자정책 제도 개선의 원칙은 '입국 전 엄격한 유학생 비자 검증'과 '입국 후 유연 관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 입국하기 전 철저히 검증해 선별하겠

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정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학비자가 거부되지 않도록 해 우수 인재 유치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입국한 후에는 학생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한다.

정성호 장관은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이 대한민국에서 꿈을 펼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민생경제가 되살아나도록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매진하겠다"고 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1. 정책 환경

비전

경제와 지역 발전 기여, 국민과 이민자의 삶에 힘이 되는 新이민정책

목표

우수인재 유치, 지자체·민간 참여 확대로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
유입 선별 및 사회통합 촉진으로 다가올 이민 사회 선제적 대비

 법무부

보도자료

2024. 9. 26.(목) 10:00 브리핑 시작시 배포 2024. 9. 26.(09:00)

-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대비 -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 주요 정책 및 기대 효과 >

- ① (우수인재 유치) “톱티어(Top-Tier) 비자”, “청년 드림 비자” 등 새로운 비자 제도를 통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우수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
- ② (지자체·민간 참여 확대) “광역형 비자” 도입, “지역특화형 비자” 및 농·어업 “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
- ③ (사회통합 강화) “이민 2세대 자립 지원”과 “맞춤형 사회통합교육”, “통합정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회통합 촉진 및 갈등 방지
- ④ (과학적 도입관리)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통해 국민 일자리 침해 예방 및 선별 유입, “비자 심사 인프라 강화” 및 입국 전 검증 강화

➡ (기대효과) 선제적 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입 선별과 통합 촉진을 통해 국민 일자리 보호 및 사회갈등 예방

(외국인 유학생) 유학-취업 연계 강화

졸업 후 인턴활동 등 진로탐색 기간 확대,
취업가능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확대 등

=> 졸업 후 떠나지 않고 우리 사회에 기여

I.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운 정책이 필요합니다.

2. 정책 추진방향

중점 추진과제

1. 우수인재 유치트랙 다변화

- Top-Tier비자, 청년드림 비자 신설
- 유학생 졸업 후 구직, 취업 연계 강화
 - ※ 구직, 인턴기간 확대 및 비전문 분야 취업 허용
- 전문인력 배우자 단순노무 취업 허용
- 개인맞춤형 비자 체류정보 제공 시스템
 - ※ 비자취득요건, 취업가능 여부 확인 등 시스템 구축

2. 지자체 민간수요를 반영한 비자 거버넌스 운영

- 비자 제안제 도입
 - ※ 경제계의 비자 수요 반영
- 지역 특화형 비자 대상 확대
 - ※ 인구감소지역(89개) +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 총 107개로 확대
 - ※ 법무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광역형 비자 설계
- 계절근로자 사업 지원
- 지역 소재 기업의 숙련기능인력 확보 지원
 - ※ E-9의 E-7-4 지방 장기근무 요건 완화

3.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 이민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 자립 지원
 - ※ 고교 졸업 후 바로 구직 및 취업비자 전환 가능하도록 개선
- 한국어 한국문화 등 사회통합 교육 강화
 - ※ 입국 전 사회통합교육 기회 제공
 - ※ 정책 대상별 맞춤형 교재 개발
- 외국국적동포 차별 해소 등 체류 지원 (F-4통합, 범위확대)
- 사회통합기금 신설 중장기 검토

2. 정책 추진방향

중점 추진과제

25.9.23.(화), 법무부 제2회「비자·체류정책협의회」

수용 안건

일반기능인력(E-7-3) 건설기계 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산업부] 연간 100명 도입 2년간 시범 '26.2.2 시행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직종 신설 [농식품부] 연간 150명(업체당 2명) 도입 2년간 시범 '26.1.2 시행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D-2) 인턴십 허용요건 완화 [산업부] '25.11.17 시행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R&D 직무 인턴십 희망자 시간제 취업 한국어 허가요건 완화(TOPIK 4급 → 2급) 또는 면

제특정활동(E-7) 특례 개선 및 중기부 고용추천권한 추가 [중기부]

일반기능인력(E-7-3) 양식기술자 도입범위 확대 [해수부] 76개 중 16개 품종 허용, 연간 200명 도입

기술창업(D-8-4) 점수제 면제 특례 개선 [전북특별자치도] '25.11.17 시행

2. 정책 추진방향

중점 추진과제

25.9.23.(화), 법무부 제2회「비자·체류정책협의회」수용 안건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D-2) 인턴십 허용요건 완화 [산업부] '25.11.17 시행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R&D 직무 인턴십 희망자 시간제 취업 한국어 허가요건 완화(TOPIK 4급 → 2급) 또는 면

제
일반기능인력(E-7-3) 건설기계 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산업부] 용접 및 도장, 연간 100명 도입 2년간 시범 '26.2.2 시행

○ (자격요건)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 +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

-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 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 취득 후의 경력만 인정

+

○ (기량검증)

산업부 지정기관(예: 한국건설
기계산업협회) 기량검증 확인서

○ (유학생 특례) 경력 요건 면제

- 국내 대학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취업 확정 + 산자부장관 고용 추천

- 비이공계 졸업자 중 기술훈련 과정* 이수자 + 취업 확정 + 산자부 장관 고용추천

* 산업부 지정기관(예: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의 위탁 교육기관에서 지정된 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일

정 수준 이상의 학업성취도를 충족한 자

2. 정책 추진방향

중점 추진과제



25.9.24.(수), 법무부 제2기「이민정책자문위원회」

“이민정책은 단순히 인력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통합과 인권 존중·지속가능한 경제성장·지역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국가전략이 되어야 하고, **이주민의 국내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역동적인 이민정책 수립**을 통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실현에 법무부가 앞장”

[전문대(학과)를 활용한 중간수준(middle-skill)의 기술인력 양성 제도 도입]

○ 지역산업에 필요한 외국인력 공급 위해 전문대학에서 중간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 유학생의 체계적 육성 방안 논의

– 저학력·저숙련 인력 도입체계의 산업경쟁력 약화, 적정임금 및 **한국어 요건 강화한 취업비자** 신설 필요

– 향후 전문대와 광역지자체 등 의견 수렴, 공모절차 통해 전문대에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지정 논의  법무부

2. 정책 추진방향

과제 첨단산업 과학기술의 미래를 여는 최고 우수인재 유치 지원

Korea-Science & Technology Advanced human-Resources

(K-STAR 비자트랙 신설) 매년 5개 과학기술 대학 100명 => 32개 일반대학 500명 확대
(졸업 즉시 거주(F-2) 자격 부여 => 영주(F-5)자격 신청까지 최소 3년 단축
우수연구실적 입증 시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특별귀화 신청 허용



'26.3.4. 법무부장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

2. 정책 추진방향

과제 신(新) 성장동력으로서의 유학생 활용



'26.3.4. 법무부장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

(산업계) 기존 외국인력제도 한계로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역량을 갖춘 기술인력 수요 제기

고용허가제(E-9)는 저학력·저숙련, 숙련기능인력(E-7-4)은 장기화, 체계적 직업훈련을 통한 전문성 저하

(과제) 기업의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해 재학 단계부터 유학생 체계적 관리* 및 사회통합 지원 유도정책 필요

* 유학생의 양적 확대에도 질적 관리 부실 등의 과제가 부상('25.7 주간한국)

Korea College-to-Regional Employment)

(K-CORE 비자 신설) 한국어와 기술을 익힌 전문대 유학생이 지방기업 취직 시 중간기술인력(E-7-M) 비자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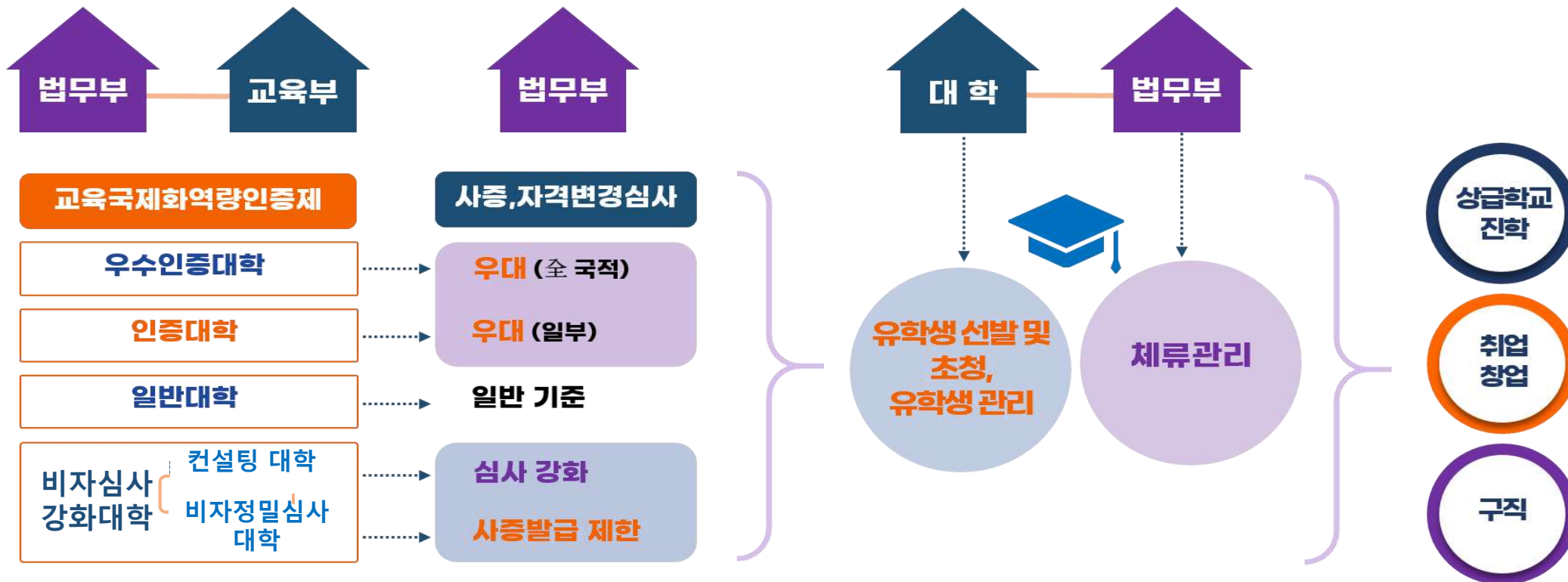
※ '26년 2월 현재 자동차 제조, 정밀기계 등 16개 전문기술학과 지정

(사회통합 우수대학 우대) 유학생 사회통합·자립역량 우수학과 평가제* 도입, 유치부터 취업까지 혜택 부여)

*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 등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대학연계 과정 운영, 유학생 학업, 취업 성과 등

3. 유학 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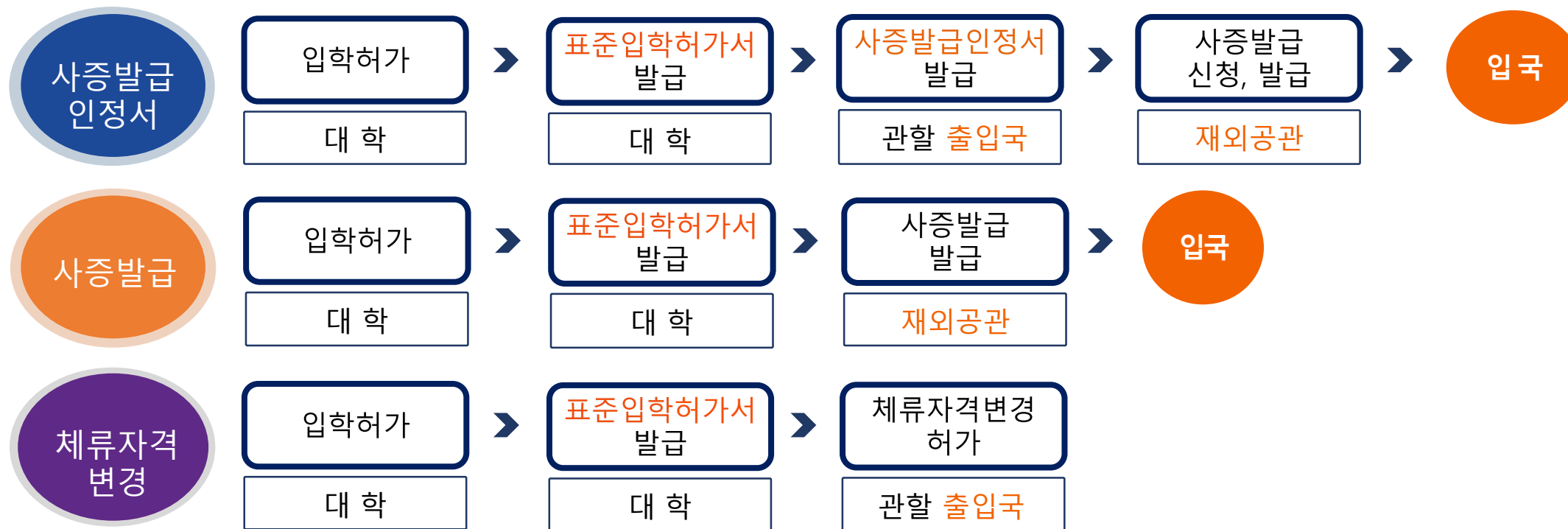
기본 방향



인증제 평가 결과는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심사의 중요 판단자료로 존중하되,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별도 기준에 따라 심사 가능

3. 유학 비자

사증발급 및 체류 관리



1회
체류기간
상한

학위과정(D-2-1 ~ D-2-4) 2년 이내

비학위과정(D-2-5~8) 1년 이내

어학연수(D-4-1, D-4-7) 연수종료일 + 15일로 하되, 체류기간 6개월 이내

3. 유학 비자

체류자격과 활동범위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별표 1의2 중 14. **교수(E-1)** 부터 22. **선원취업(E-10)**까지 및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한다. ~



외국인 근로자
"국내에서 **취업**을 하려는 사람"



외국인 유학생
"국내에서 **학업**을 하려는 사람"

재정능력 입증

"유학생의 주된 활동은 학업"

유학(D-2)은 취업 체류자격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불법취업 등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학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유학경비 충당 능력을 확인하려는 것



D-2 수도권 2천만원, 지방 1천6백만원

D-4 수도권 1천만원, 지방 8백만원

재정능력 : 등록금 + 체재비

3. 유학 비자

유학생 시간제 취업허가

"유학생의 주된 활동은 학업"

유학(D-2)은 취업 자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으나,
주된 체류목적인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업적인 취업활동이 아닌

통상적인 대학생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활동을 허용

유학

성실한 학업활동
.....→
충분한 한국어능력

유학 후
취업

대상자 및 허용시간

(유학) 직전학기 평균 성적 C학점 이상으로 한국어능력 충족자

- 방문학생(D-2-8)은 6개월 경과 후 가능
- 한국어능력 미 충족 시 주중 10시간으로 한정

(어학연수) 6개월 경과, 출석률 전체학기 90% 이상, 한국어능력 충족자

구분	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세종학당
전문학사, 학사 1~학년	3급	3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중급1
학사 3~4학년, 석박사	4급	4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중급2
어학연수	2급	2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초급1

(어학연수) 주중 20시간

(전문학사, 학사) 주중 25시간

(석박사) 주중 30시간

✓ 인증대학 or 성적 우수자(A학점) or 한국어능력 우수자(5급 이상)는 주중 5시간 추가 허용

✓ 한국어요건 충족한 D-2는 주말, 공휴일, 방학기간
제한없음

3. 유학 비자

시간제 취업 허용 활동

(원칙) 전공 연관성 있거나 학업과 병행가능한 활동
대학생이 통상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

(제한) 선량한 풍속 및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활동
과거 불법고용 업체 및 고용주
전문인력(E-1~E-7) 활동범위
비전문취업(E-9, E-10),
미성년 대상 교육 유관시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활동,
파견도급 알선,
원거리 근무

(예외)

한국어능력 4급(KIIP, 세종학당) 제조업 허용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의 안전보조원, 놀이보조원 (E-2가 아님)

계절근로 활동

전문인력(E-1~E-7) 보조적인 활동
(통번역 보조, 조리사 보조, 사무보조 등)

방학기간 중 대학 외부기관 및 기업체에서의
전문인력(E-1~E-7) 인턴 활동

✓ 단, 보조활동이나 인턴이라도 국내법에 따른 자격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추어야 함

소속대학 내 학업과 연계된 연구, 인턴활동 허가 면제, 표준현장실습 및 필수현장실습 허가 면제

4. 광역형 유학비자



보도자료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예보 즉시 보도

예보 2024. 12. 1.(일)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

법무부, 지역 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 법무부는 '24. 9. 26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2025년부터 실시합니다.
- 이번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2024년 12월 광역지자체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3월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여 2026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번 시범사업에서 추진될 광역형 비자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형 비자란 무엇인가?

- 기존 비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광역형 비자는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자제도를 설계하여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 이민정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유학 비자(D-2)와 특정활동 비자(E-7)를 대상으로 광역형 비자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붙임 1, 2 참조)

※ 추후 체류자격 확대 검토 예정

2) 운영 기간 및 방식

-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운영되며, 사업 대상 지자체는 별도로 구성될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됩니다.
- 선정된 지자체가 해당 외국인을 추천하면, 그에 따라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 발급하는 형태로 제도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신(新) 출입국 이민정책 후속 조치 일환 24.12.1. 지역 맞춤형 광역형 비자 시행 발표

현재

법무부에서
전국 동일한 유학
비자 제도

시범

지자체 실정 반영
유학 비자제도

지자체 - 대학 - 지역산업 연계

유학생의 지역 내 안정적 정착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4. 광역형 유학비자 정책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법무부 공고 제2024-499호)

체류자격	• 유학(D-2), 특정활동(E-7)	
운영기간	• 약 2년 (2025.6.13 ~ 2026.12.31) ※ 단, 지자체 평가, 불법체류 다수 발생 등 사정 변경 시 지자체 별로 운영기간 변동 가능	
공통요건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자 설계 ※ 지역 특성을 고려하되, 국가 전체 이민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 필요 • 광역형 비자 사업별 쿼터 및 동일 국적 추천 제한 설정 • 광역지자체의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을 선정 및 평가에 반영	
세부요건	유학(D-2)	특정활동(E-7)
	1) 정규 학위 취득과정(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해당 ※ 원격대학, 평생교육기관, 기능대학 중 직업훈련과정, 야간대학(대학원) 제외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하위대학(컨설팅대, 비자제한대) 제외 2) ❶ 학업에 충실 ❷ 졸업 후 취업 연계성 고려 3) 학력을 제외한 대상 요건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설계	1) 현재 운영 중인 E-7-1~3에 해당하는 직종 2) 해당 직종의 ▲학력▲경력▲소득요건(최저임금 이상)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 ▲제출서류 등 본인에 대한 요건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설계

4. 광역형 유학비자

2. 사업 운영 절차

도입 및 운영				평가 및 환류
① 법무부	② 광역지자체	③ 법무부 + 심의위원회	④ 법무부 + 광역지자체	법무부 + 심의위원회
•광역형 비자 요건 마련	•계획 제출 ※ 추진절차, 안전관리, 사회통합 방안 등 포함	•(법무부) 계획 검토 후 심의위원회 상정 •(위원회) 시행 여부 등 결정	•제도 시행 - (지자체) 추천 - (법무부) 비자발급	•(법무부) 광역형 비자 성과 검토 •(위원회) 시행 지속여부 등 결정
지자체 선정 주요 기준	(추진 필요성) 생활인구·정주인구 증가 등 광역형 비자 도입 취지와 의 합목적성 (계획의 적절성) 지역 현황 분석, 지역 활성화 사업의 고유성·차별성 및 광역형 비자와 연계 (사회통합 계획) 사회통합정책 지원 등 계획 및 추진실적, 이주민 안전관리 방안 마련 등 (추진 가능성) 추진체계 구성, 안정성 및 전문성, 의지와 역량, 합리적 추진 절차 마련			
사업 평가 주요 내용	• 사업기간 중 연도별 평가(전년도)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사업에 반영 ※ 시범사업은 '25년 말 평가 실시, 필요 시 실태조사 실시 • ❶ 쿼터 대비 충원율(허가 기준), ❷ 사회통합정책 참여도, ❸ 이탈율(불법체류), ❹ 지역 내 외국인 국적별 구성 비율을 핵심으로 선정 • 핵심지표별 평가에 따라 쿼터 배분 우대 또는 삭감 기준 마련 • 연도별 평가점수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4. 광역형 유학비자 정책

3. 배정 인원

지자체	대상 (지자체별 전공 또는 학과 선정)	배정인원
서울	市핵심산업(로봇, AI, 바이오, 핀테크 등)분야 이공계 관련 학과 입학 유학생	250
부산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학과 입학 유학생	1,000
인천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외국 대학교 국내 캠퍼스 유학생	60
광주	서영대학교 AI미래자동차과 입학 유학생	60
강원	미래산업(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 모빌리티, 미래 에너지, 푸드테크, ICT) 유관 학과 입학 유학생	770
충북	항공산업, 화장품·식품·바이오 산업, 뿌리산업, 복지인력,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관련 학과 입학 유학생	830
충남	농어촌지역 / 충남 5대산업 전공학과(자동차부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 입학 유학생	250
전북	외국인전용 계약학과, 지역특화학과, 뿌리산업 관련 학과 입학 유학생 ※ 청정에너지, 첨단소재, 의·생명 등	670
전남	지역 핵심산업*과 연계된 학과 입학 유학생 * 바이오, 에너지, 조선, 화학, 철강, 복지, 관광 등	280
제주	관광산업, RISE 산업 연계 학과 입학 유학생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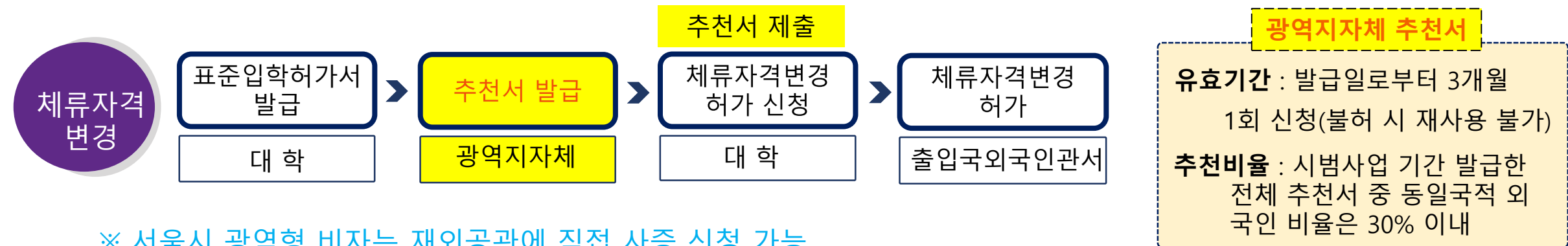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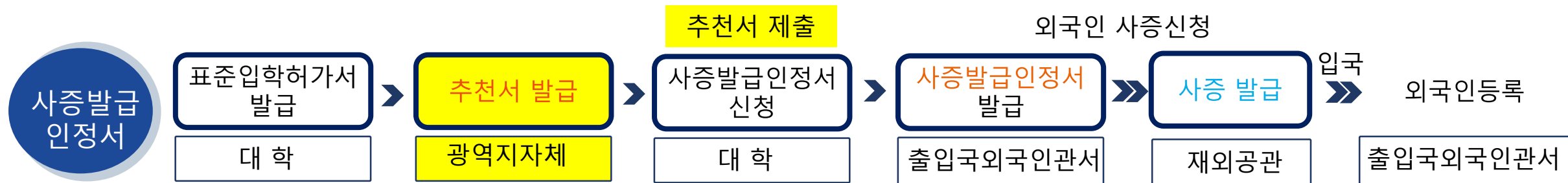
4. 광역형 유학비자 정책

4. 우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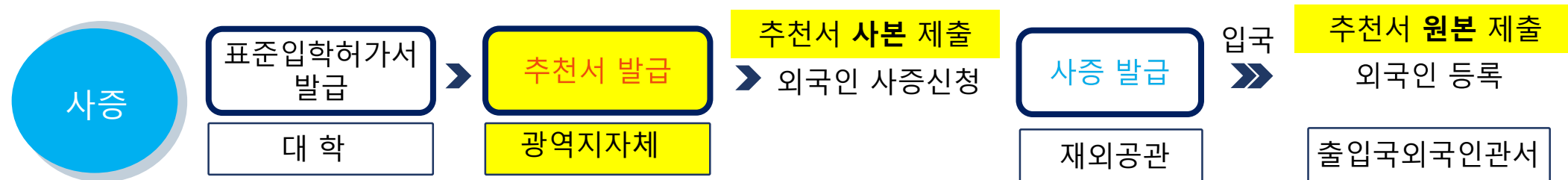
- 지자체, 졸업 후 지역산업 등과 연계될 수 있는 전공 또는 학과 선정
- 광역형 비자 유학생 재정능력 부담 완화 (원칙적 기준 연간 800만원 이상)
- 시간제 취업 주당 30시간 허용 + 5시간(A학점, 사통5단계 이수, TOPIK5급 종합평가 합격자)
※ 주말,공휴일, 방학기간은 제한없이 취업 허용
- 일정한 요건 구비 시 학기 중 인턴 허용
 - (사통4, TOPIK4급이상, B학점 이상), 전문학사 3학기 수료 후 6개월 ~ 학사 3학년 이상 수료 후 1년 부여

4. 광역형 유학비자

5. 광역형 비자 발급 절차



※ 서울시 광역형 비자는 재외공관에 직접 사증 신청 가능



4. 광역형 유학비자 정책

6. 지역별 맞춤 요건

지자체	대상 분야	주요 맞춤 요건
서울	• 시 핵심산업분야 이공계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등의 요건 충족시 인턴활동을 위한 휴학 허용 •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
부산	•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자동차 부품 관련 학과	• 부산광역시 지정 장학생 등에 대한 재정요건 완화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등의 요건 충족시 학기 중 인턴활동 허용
인천	• 외국대학교 국내캠퍼스	• 외국대학 국내캠퍼스 유학생 대상 체류기간 상한 확대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등의 요건 충족시 학기 중 인턴활동 허용
광주	• AI 미래자동차과	• AI 미래 자동차 관련 학과 재정요건 완화
강원	• 미래산업(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미래에너지, 푸드테크, ICT) 유관 학과	• 등록금/생활비를 분할하여 재정요건 입증 •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등의 요건 충족시 학기 중 인턴활동 허용

4. 광역형 유학비자 정책

6. 지역별 맞춤 요건

지자체	대상 분야	주요 맞춤 요건
충북	• 항공·화장품·식품·바이오, 뿌리산업, 복지인력,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관련 학과	•충북형 일·학습병행 참여 유학생에 대해 재정요건 완화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
충남	• 농어촌지역 및 충남5대산업 전공학과(자동차부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	•농어촌지역·충남5대산업 전공 및 충남형 일·학습병행 참여 유학생에 대한 재정요건 완화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
전북	외국인전용 계약학과, 지역특화 학과, 뿌리산업 양성대학 중심	•지역산업 관련 대학 재정요건 완화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등의 요건 충족시 학기 중 인턴활동 허용
전남	• 지역 핵심산업(바이오, 에너지, 조선, 화학, 철강, 복지, 관광 등) 연계 학과	•지역핵심산업과 연계한 대학별 학과 유학생 대상 재정요건 완화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 •일부 전문직종의 시간제 취업 허용(요양보호사, 주방장 및 조리사)
제주	• 관광산업, RISE 산업 연계 학과	•관광 분야 학과 유학생에 대해 재정요건 완화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

4. 광역형 유학비자 정책

7. 추진 일정

- ('24. 12월) 광역지자체 공모
 - ※ 공모 절차 개시 후 광역지자체 실무자 대상 설명회 개최
- ('25. 1~2월) 광역지자체 공모안 접수
- ('25. 3월) 심의위원회,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실시 지자체 선정('25.3.31)
 - 유학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제주
- ('25. 4월) 유학비자 광역지자체 대학별 쿼터 협의 및 배정('25.4.30)
- ('25. 6월) 광역형비자 시범사업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제정, 시행 ('25.6.13부)
- ('25. 12월) '25년 시범사업 평가 (예정)
- ('26년 ~) '26년도 시범사업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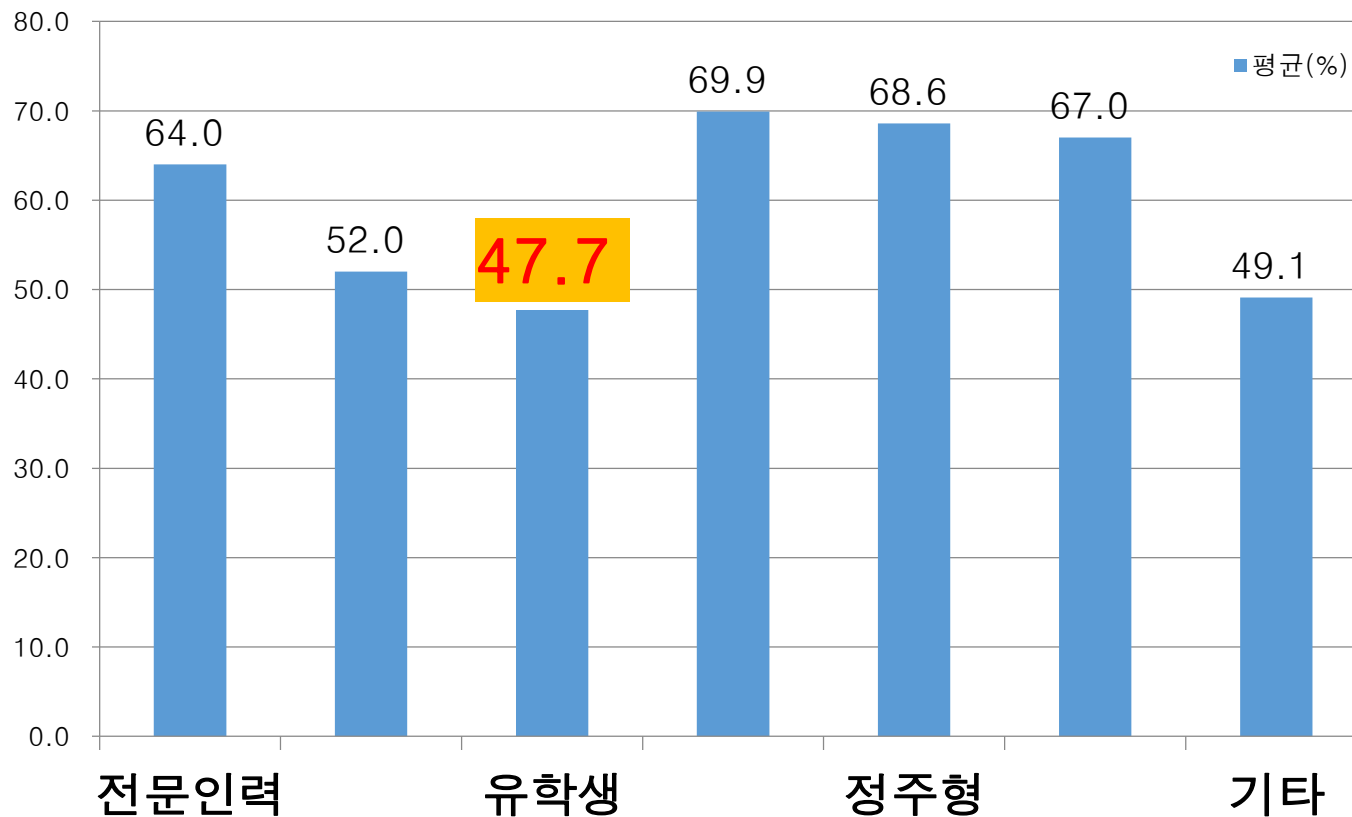
4. 광역형 유학비자 정책

7. 추진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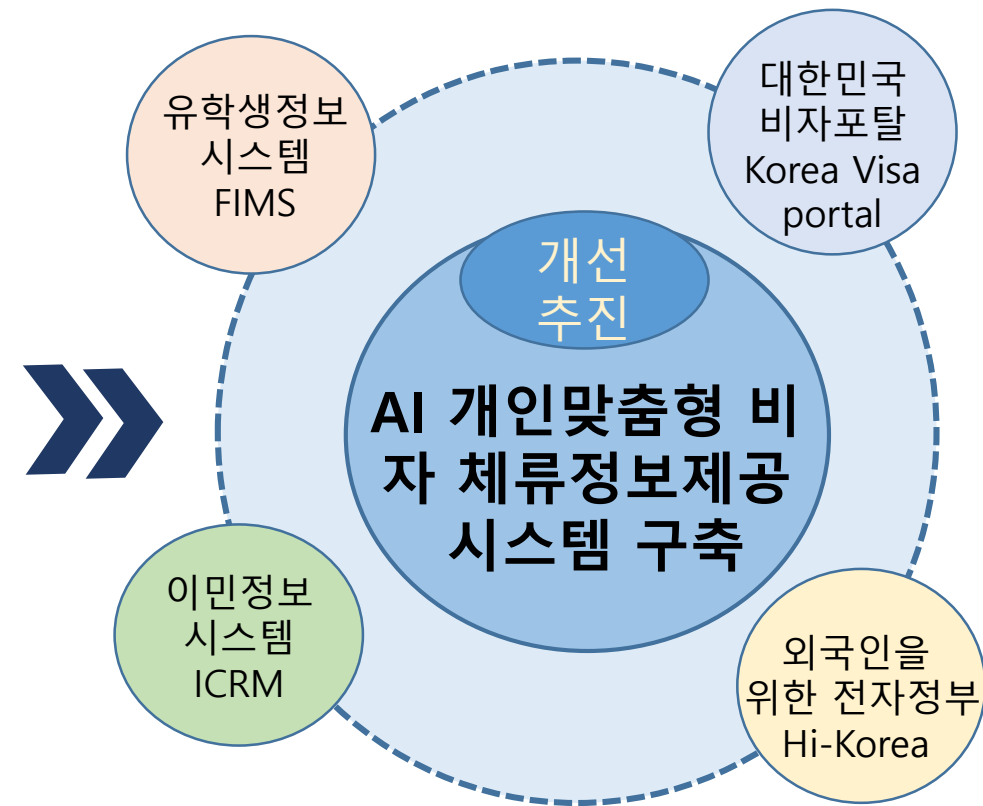
- (25. 12월) 시범사업 평가 결과 대학 조정 내용 병기

5. 유학생 취업 지원

이민자 유형별 행정서비스 이용률



※ 24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법무부, 통계청)



※ 비자취득요건, 취업가능 여부 확인 등 시스템 구축

5. 유학생 취업 · 정착 지원

취업 가능 비자

단기 취업

C-4 단기취업

전문인력

E-1 교수

E-2 회화지도

E-3 연구

E-4 기술지도

E-5 전문직업

E-6 예술흥행

E-7 특정활동

비전문인력

E-8 계절근로

E-9 비전문취업

E-10 선원취업

기타

F-2 거주

F-4 재외동포

F-5 영주

F-6 결혼이민

H-1 관광취업

H-2 방문취업

※ 구직(D-10) 비자 : 졸업 - 구직 - 취업, 졸업 - 취업 - 구직 - 취업 등

5. 유학생 취업 · 정착 지원

특정활동(E-7) 비자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 보유 외국인에게 발급 가능한 대표적인 취업 비자
법무부장관이 특별 지정한 92개 직종, 직종 및 직능 수준에 따라 4개의 세부자격으로 분류

전문인력 (E-7-1)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준전문인력 (E-7-2)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	10개 직종
일반기능인력 (E-7-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2개 직종
숙련기능인력 (E-7-4)	숙련도를 갖춘 비전문인력	3개 직종

※ 24.7 요양보호사 추가

※ 24.8 송전전기원 추가, 25.10. 자동차 판금
· 도장원 신설

고소득자, 첨단기술분야 종사자는 직종에 관계없이 비자발급 허용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5. 유학생 취업 지원

특정활동(E-7) 비자

자격 요건

- ✓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학위 + 1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보유
- ✓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5년 이상 근무경력 보유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 특례

- ✓ 국내 대학 **학사 이상** 학위 **전공과 무관**하게 비자 발급 허용 + **경력요건 면제**
- ✓ 국내 대학 **전문학사** 학위 전공 관련 분야 취업 시 비자 발급 허용 + **경력요건 면제**

5. 유학생 취업 · 정착 지원



졸업생

- ✓ **성실**하고 **한국어능력이 충분**한 졸업생, **취업 지원** 확대 (국민 일자리 침해않는 범위 내)
 -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우수 유학생의 취업 연계 확대
 - 구직(D-10) 허용기간 확대 및 시간제취업활동 개선 등 국내 대학 졸업생 취업 지원
 -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 분야에 유학생 취업 허용 확대
 -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에게 사무,전문직 외 비전문취업 분야 확대 추진
- ✓ **내국인 기피 분야, 인구감소지역 등 취업 시 준전문인력(E-7-2) 및 거주(F-2) 변경 허용, 가족 초청 등 정주 지원**



유학생 가족

- ✓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가족 동반(F-3) 비자 허용
 - 체류 2년 이내 전문학사(D-2-1), 교환학생(D-2-6), 방문학생(D-2-8)이 임신,출산,질병 등 인도적인 경우
- ✓ 유학생 부모에 대해 계절근로자(E-8) 초청 허용

5. 유학생 취업 · 정착 지원

유학생 취업 지원 특례 신설 (25.10.29)



졸업생

✓ **‘일 · 학습 병행 프로그램’ 이수 졸업생**, 훈련 연관 E-7 직종 취업 시 **경력요건 면제**

※ 전문학사 이상 외국인이 전공과 무관한 E-7 직종 취업 시 1년 경력 필요

✓ **구직(D-10) 기간 최대 3년까지 상향** (1회 최대 1년 부여 가능)

※ 다만,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는 1년으로 제한

✓ **동일기업 인턴 기간 최대 1년으로 상향, 총 인턴기간 제한은 해제**

✓ **일반기능인력(E-7-3) 자동차 부품제조원** 시범운영(안) 개선

▪ 운영기간 : ‘25년 ~ ‘26년 => ‘25년10월 ~ ‘27년9월

▪ **非이공계 국내 전문학사 유학생**, 대상자 선발 위한 훈련프로그램 참여 시 관련 분야 1년 **경력 요건 삭제**

▪ **이공계 국내 전문학사 이상 유학생**,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취업 확정 시 **체류자격 변경**(산업부 고용추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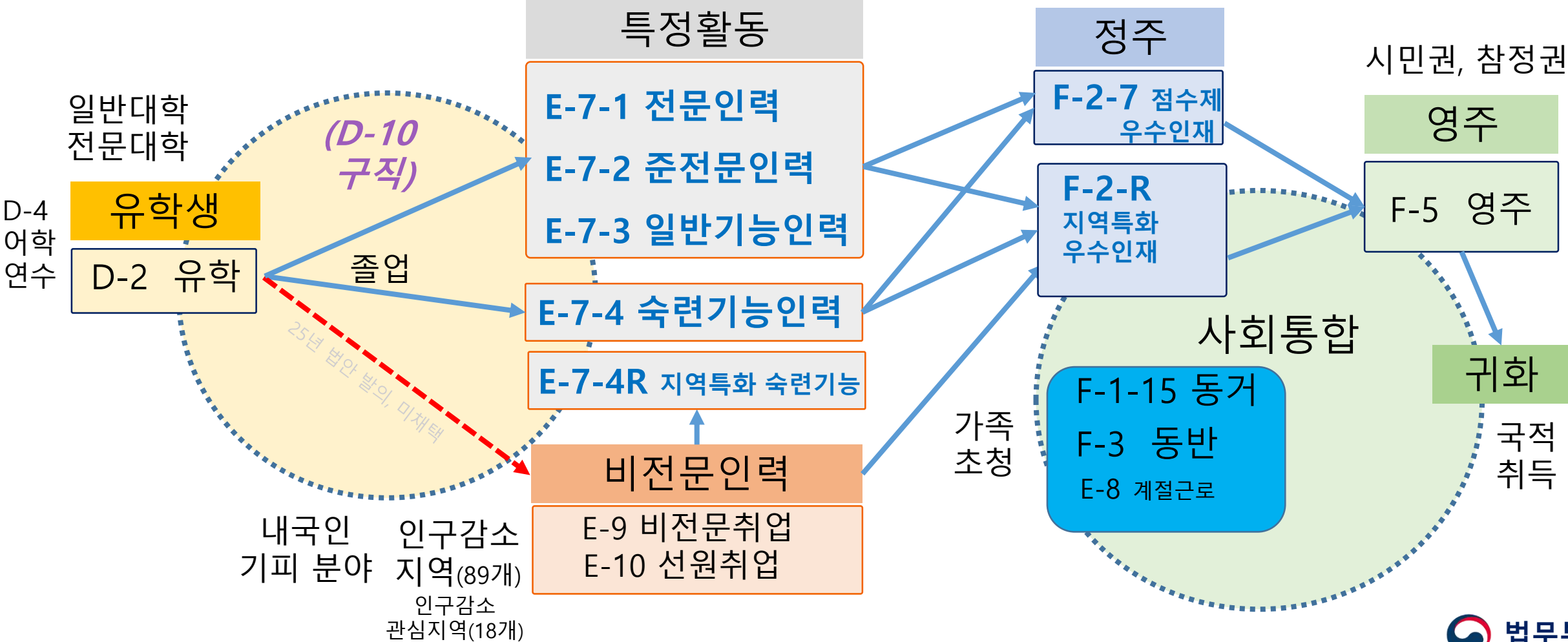
※ 프로그램 참여 장벽 해소 등 국내 체류 유학생의 취업 지원 및 직종 도입 확대

✓ **일반기능인력(E-7-3) 송전 전기원** 시범운영 종료기간 연장 (‘25년 => 27년)

※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관련 인력 수요 증가 가능성 고려

5. 유학생 취업 · 정착 지원

취업 및 정착 흐름도



질의 및 답변



법무부

능동적이고 유연한 이민정책



미래로 도약하는 이민행정

2025 KAFSA/KADIA 하계 총회 사업보고

목 차

01

2026 KAFSA 조직 및 주요사업

- 01 2026 KAFSA 비전 및 조직
- 02 2026 주요사업
- 03 준회원제도 및 펀딩 현황

02

2026 NAFSA

- 01 2026 NAFSA 개요
- 02 2026 NAFSA 사진 모음

03

회칙 개정 방안

- 01 회칙 개정 방안

2026년 KAFSA 비전, 슬로건 및 실행 과제 //

비전

K-EDU의 세계화와 대학 국제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 네트워크

슬로건

기본에 충실한 KA, 미래를 디자인 하는 FSA

3대 실행
전략

업무

when, what, how

로드맵 작성

회계

why, what, how

구체성 및 투명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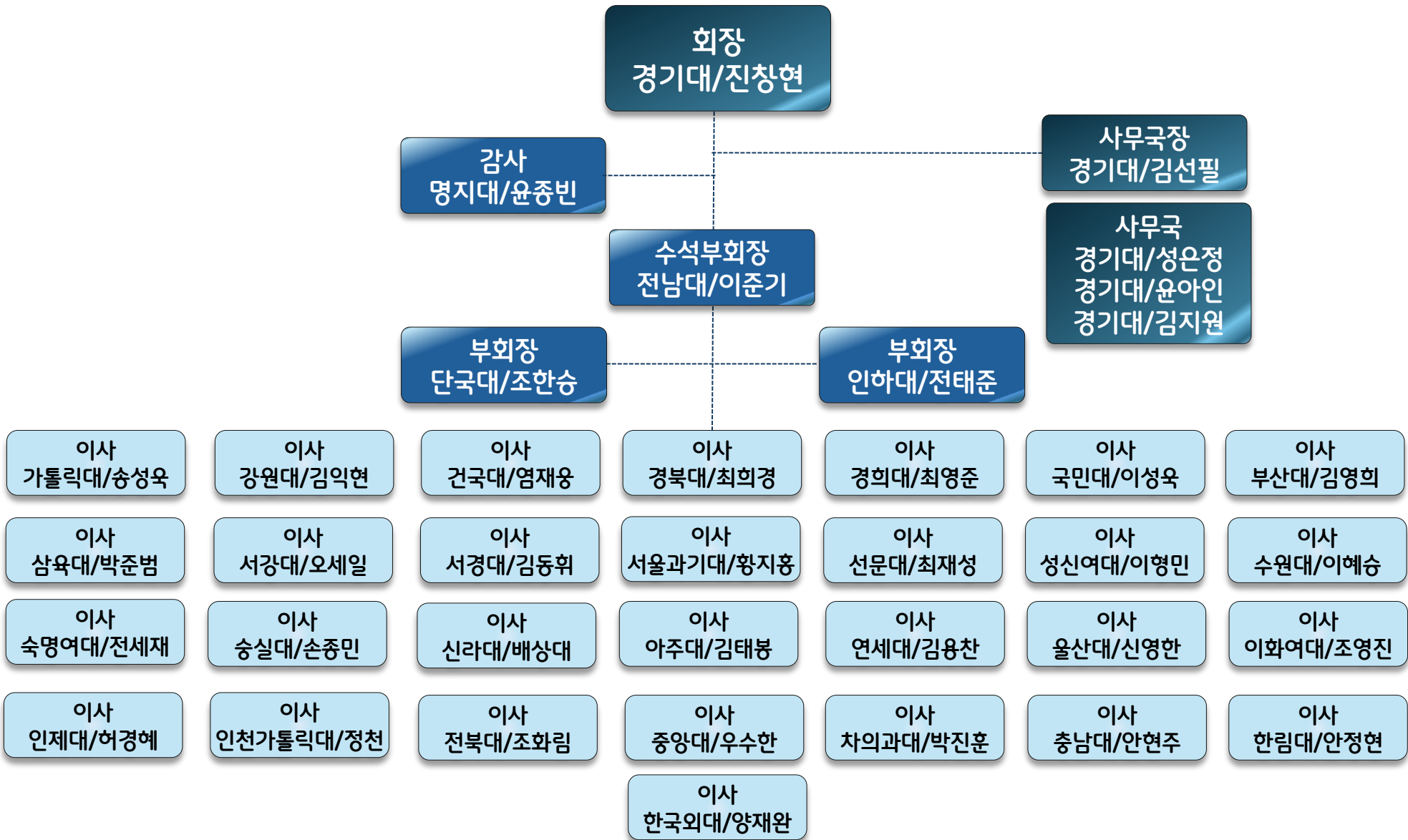
대학간 성과 공유 강화,
교육부와 소통 강화



2026

조직

구성



2026년 임원교 34개교, 회원교 94개교(임원교 포함)



2026

주요행사

일정	주요 내용	장소
2026.03.24~04.03	• 전국대학 교육부 국제화 정책 수립 의견 수렴	
2026. 04. 09	• 교육부 주관 국제화 정책 간담회	경기대 서울캠퍼스 세미나실
2026. 04. 10	• 2026. 1차 KAFSA/KADIA 임원회의	서울역 근처 식당
2026. 05.10~22	• 주한 EU 대표부 대학과 세미나 참석 조사	
2026. 05.26~29	• NAFSA Conference & Expo	Orange County Convention Center
2026.04.30~05.15	• 해외 연계 국제프로그램 관련 설문조사	
2026. 06.19	• 해외 프랜차이즈 교육과정 운영 대학 간담회	서울 연세대학교 세미나실
2026. 06.24~26	• 2026년 KAFSA/KADIA 하계 총회	
2026. 09.06~09	• EAIE Conference & Exhibition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2026. 09	• 주한 EU 대표부와 대학간의 세미나(예정)	2026. 9월 예정
2026. 10	• 교육부 주관 국제교류 관련 간담회(예정)	2026. 10월 예정
2026. 12	• 2026년 KAFSA/KADIA 동계 총회	2026. 12월 예정

- 대학 국제화 관련 민간 기관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KAFSA 회원 대학과 민간 기업의 다양한 네트워크 및 플랫폼 활용



준회원 제도 & 펀딩 현황

기관명(사업 분야)	등급	펀딩 현황
하이어다이버시티(비자)	Platinum	10,000,000
Flywire(결제 시스템)	Gold	7,500,000
ETS Korea	Gold	7,500,000
* 주식회사 웅진씽크빅(신규)	Gold	7,500,000
* Pearson PTE(7월 16일납부예정) (신규)	Gold	7,500,000
SJC Global	Silver	5,000,000
(주) 한국국제교육원	Silver	5,000,000
* (주)드림아이티(티키타) (신규)	Silver	5,000,000
* (주) 유비온(신규)	Silver	5,000,0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NAFSA/KAFSA 지원금	10,000,000
합계		70,000,000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는 NAFSA 지원금 1,000만원 지원



행사 개요

구분	주요 내용
행사명	• NAFSA 2026 Annual Conference & Expo
일정	• 2026년 5월 26일(화) ~ 5월 29일(금)
장소	• Orange County Convention Center (ORCCC), Orlando, Florida
목적	•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국제 교육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 글로벌 고등교육의 최신 트렌드 및 혁신 전략 파악 • 기관 간 파트너십 강화 및 신규 협력 체결 • 국제교류 및 유학생 유치 전략 벤치마킹 • 국제화 우수사례 및 AI·학생이동 관련 세션 참가 • 기관 홍보 및 글로벌 파트너십 발굴
프로그램	• 국제교육 Expo 전시회 / 글로벌 대학·기관 미팅 / 세미나 및 워크숍 • 네트워킹 행사 / 국제교육 정책 및 비자 세션 • AI와 국제교육 관련 발표 / 국가별 교육협력 상담



행사 일정

일정	주요 내용	장소
2026. 05. 11~25	NAFSA 출장 준비(홍보자료, 비자 등)	
2026. 05. 26.(화)	11시 30분 이후 전시 및 상담 시작	Orange County Convention Center
2026. 05. 27.(수)	08:30~17:30 전시 및 상담 17:30~19:30 KIAT-US 리셉션	플로리다 Helena Modern Riviera (국내외 대학 및 기업 관계자 등 65명 이상 참석)
2026. 05. 28.(목)	08:30~17:30 전시 및 상담 17:30~19:30 NAFSA 간담회	Rodizio Grill Orlando 9101 International Drive #1220 Orlando, Florida, 32819
2026. 05. 29.(금)	08:30~11:15 상담 및 대학 방문 - 이후 부스 철거	University of South Florida 방문



행사 사진



<경기대>



<경상국립대>



<국민대>



<동국대>



행사 사진



<부산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아주대>



<울산대>



<충북대>



<전남대>



KAFSA

회칙

개정

방안

1

회칙 현안: 내용 모호함에 따른 경비 지출 일관성에 대한 문제 발생

제18조

- ① 회장은 협의회 업무 진행을 위해 필요한 여비, 회의비, 소모품비 등 경비를 적정히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사무국 직원 2인에게는 국제교육박람회 참가 관련 경비를 지원하며 담당 직원에게 매월 소정 수당을 지급한다.
- ③ 회장은 수석부회장교 소속 교직원 1인에 대하여 국제교육박람회 참가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해결 마련 필요

참가범위, 지급 범위, 경비 처리, 회장의 권한 등에 대한 모호한 부분에 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거나, 세부 지침서 필요

3

규정 개정(안) 작성

10월전에 회원교 대상 규정 개정 방안 의견 수렴 후 개정(안) 작성

4

규정 개정(안) 총회 심의

12월 동계 KAFSA 총회에서 심의

A decorative graphic on the left side of the slide, featuring a dark blue background with a network of white dots and lines. Several circular icons are scattered throughout, including a book, a clock, a graduation cap, a microscope, and a gear.

감사합니다.